

# 오늘의 주요기사

2023 4 25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江原日報	21	[ ]							1	
江原日報		[ ]							1	
江原日報	03								2	
강원도민일보	03			...	'			...	2	
江原日報		[ ]	.						3	
江原日報	21	[ ]			( )				3	
江原日報	21	[ ]			( )				3	
江原日報		[ ]					[1/2]		4	
江原日報	03								6	
		[ ]			,				7	
			1		,		[1/2]		8	
정신신문						43			10	
강원도민일보	02	"GJC			,			"	11	
			道		,				12	
강원도민일보	02		1				"	...	13	
		[ ]			,	'			14	
江原日報	04							...	15	
강원도민일보	01					18	.		16	
강원도민일보	03		9				"	"	16	
강원도민일보	04		'		'		...	3	17	
강원도민일보	21					12%	.	...	0	17
강원도민일보	19	[ ]							18	
강원도민일보	19	[ ]			.	2			19	
江原日報	19	[ ]	1		.		,	가	20	
江原日報	19	[ ]			,				21	

## 江原日報

2023 04 25 ( )  
21

◇권혁열강원도의회장은 25  
일 오전 8시 도  
의회 세미나실  
에서 개최되는  
제8회 강원아카  
데미에 참석.



## 江原日報

2023 04 24 ( )

###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권혁열 강원도의회장은 25일 오전 8시 도의회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제8회 강원아카데미에 참석.



**알펜시아 매각 관련 질의하는 김기홍 의원**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위원장:하석균)가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알펜시아 매각 절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이 알펜시아 매각 절차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04 25 ( )  
03

### 국힘 당협위원장 선임 돌입... '장기간 공석' 원주을 인선 주목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조직 정비를 위한 당내 기구를 속속 구성하면서 장기간 공석 상태인 원주을 당협 위원장 인선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윤리위원장·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했으며 상반기 중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재구성, 도내 원주을 당협을 비롯한 전국 사고당협에 대한 당협 위원장 선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6~7월로 예상되는 전국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와 맞물려 7월을 전후해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한 위원장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원주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도전했던 기존 후보들은 모두 재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실시된 당협위원

장 공모 면접에 참여했던 이들은 권이중변호사, 박동수변호사, 안재윤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현역 도의원인 3선 김기홍 부의장과 초선 최재민 도의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차기 총선 대열 합류를 예고했다. 더불어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탈환을 노리고 있다.

도내 여권 관계자는 "원주을 선거구는 우리 당의 강원 지지세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라며 "당협위원장이 선임되면 총선을 대비한 지역조직 정비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 江原日報

2023 04 24 ( )

## [동정] 이기찬.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기찬(양구) 도의회 부의장은 25일 오후 1시30분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에 참석.

김기홍(원주) 도의회 부의장은 25일 오후 4시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착공식에 참석.

# 江原日報

2023 04 25 ( )  
21

### 삼척의료원 이전 착공식

◇김기홍강원도의회부의장



(원주)은 25일 오후 4시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착공식에 참석.

# 江原日報

2023 04 25 ( )  
21

◇이기찬강원도의회부의장



(양구)은 25일 오후 1시30분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에 참석.

# 江原日報

## [포토뉴스]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위원장:하석균)가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알펜시아 매각절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위원장:하석균)가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알펜시아 매각절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위원장:하석균)가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알펜시아 매각절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이 알펜시아 매각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위원장:하석균)가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알펜시아 매각절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이 알펜시아 매각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위원장:하석균)가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알펜시아 매각절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이 알펜시아 매각 절차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위원장:하석균)가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려 알펜시아 매각절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이 알펜시아 매각 절차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2023 04 25 ( )  
03

江原日報

## 전임 도정 역점 사업 들여다보는 도의회

재정특위 첫 회의 ... 알펜시아 매각·레고랜드 하중도사업 점검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첫 회의를 열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과 레고랜드 등 하중도관광지조성사업의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최문순 도정 역점 사업이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를 놓고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임 도정에서 추진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는 형국이다.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은 사법기관의 수사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임미선(비례) 도의원은 “입찰 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손해 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전 처분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추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균(강릉) 도

의원은 “알펜시아 골프장 매각설이 시중에 도는 만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무철(춘천) 도의원은 “알펜시아, 레고랜드, 망상1지구 등 전임 도정이 추진한 3대 사업의 문제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충분한 대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기홍(원주) 도의원은 “형식상의 공모를 거쳤지만 실제적으로 KH그룹을 데려왔다고 인식을 하는데 전임 지사의 단독 판단이겠는가”라며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의 자산과 미래를 맞교환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등 하중도관광지조성사

업은 도가 투입한 2,050억원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임미선 도의원은 “과거 전임 도정이 도의회 동의 없이 2,0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승인한 것은 대법원 관례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병행해서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레고랜드 채무는 추후 미분양 토지 매각 등의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이 또다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하석균 특위 위원장은 “하중도 사업의 토지 매매 계약금, 중도금 납부액, 남은 잔금 등이 의회에 조차 상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쉬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원호기자 jyh89@kwnews.co.kr

### [집중취재] 진상 규명, 강원도의의회도 나서



[앵커]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강원도의의회도 뒤늦게나마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의 사실상 첫 회의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 공개 매각의 입찰 담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책에 질문이 집중됩니다.

특히,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대책이 있냐고 따집니다.

[김기홍/강원도의의원 : "절대로 이거는 매각 무효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절대라는 건 말씀드릴 수가 없죠. 어쨌든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사항이고."]

알펜시아리조트 처분 결과, 손해가 9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엄기호/강원도의의원 : "KH강원개발에다가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906억이라는 손실을 봤다는 취지 아닙니까?"]

강개공의 막대한 부채도 여전합니다.

그동안 1조 천억 원을 빌려 썼습니다.

꽤 갚았는데도, 아직도 남은 빚이 4,000억 원이 넘습니다.

[임미선/강원도의의원 : "(강개공이) 채무만 갚냐고 본연의 행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 등 강개공의 자산 매각입니다.

또, 도청 이전 사업 등 강원도의 사업을 강개공에 몰아주겠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오승재/강원도개발공사 사장 : "저희가 개발사업이든 수익사업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강원도의의회 재정특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알펜시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송승룡

## 망상 1지구 사업선정 의혹, 정치권 확산

김형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체의 모기업이 최근 인천지역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망상 1지구 사업도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었던 사업체가 수천억 원대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부각되며 정치권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동해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망상 1지구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일부 시민까지 가세하며 20일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에 머무르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망상 1지구 사업체의 사업실행 능력을 믿을 수 없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총자산 1조 2천억 원에다 계열사 10여 개, 직원은 2천521명으로 지난 2017년 매출액은 3천 880억 원이라고 밝히며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자구역청은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리했고, 이 업체는 사전에 경매로 사들인 골프장 예정부지 덕분에 사업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당시 시의원과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망상 1지구 감사를 벌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계자 (2021년 2월)  
"감사라는 게 관련 규정상의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감시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면 뭐라 하라고 처분할 사항이 없다는 거죠."

시민단체가 검찰에 제기한 사업자 선정 의혹 진정도 당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망상 1지구 사업체의 모기업 대표가  
사업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처음부터 제기한 의혹이  
뒤늦게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사업 구역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일준 망상지구 보상대책위원장  
"이제는 경자구역청 담당자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강원도가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처음부터."

당시 망상지구 사업을 주관했던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의 사업본부장과 부장이  
망상 1지구 사업체의 근거지인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다 옮겨온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강원도마저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긴급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 강원도의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감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 도지사를 추궁하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제대로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김형호)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의 망상 1지구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2023 04 24 ( )

## 정선신문

### 정선소방서, 제43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4인조법 사진.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지난 22일 고한 생활체육공원에서 '제43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총 500여 의용소방대원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내 고장 안전지킴이로서 신뢰받는 조직운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정선군을 위한 민간지역 재난예방 중심조직으로 거듭 나고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수 서장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군수,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영기 군의회 의장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내용은 ▲축사 및 격려사 등 개회식▲소방기술경연대회 5종목(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구조기술, 외상환자평가, 심폐소생술) ▲체육행사(족구, 소방상식OX퀴즈 ▲화합의장 및 시상식 등이다.

최영수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각자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정선군민을 위해 재난 현장에 지원해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최광호 lead@jsweek.net ]

## 강원도민일보

2023 04 25 ( )  
02

### “GJC 보증채무 대위변제, 최 전 지사 변상책임 검토해야”

임미선 도의원 재정특위서 언급  
회계직원 책임법 위반행위 판단  
도 “현재 지방재정법 위반 수사”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을 대위 변제한 것과 관련, 최문순 전 지사의 변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미선(비례·사진) 의원은 24일 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2050억원에 대한 대출금 변경을 승인했던 최 전 지사도 변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며 법적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이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지자체장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지방의회 동의 없이 상환계획을 변경, 지자체가 대위변제한 경우다. 이에 대법원은 ‘회계직원 책임법’을 근거로 지자체장도 회계직원



다고 보고, 지자체장의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윤인재 도산업국장은 2014년 당시 의회 승인 없이 엘엘개발(현 GJC)의 보증채무를 확대한 것을 두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법리검토를 안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회계직원 책임법 위반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강원도는 2050억원에 280억원이 늘어난 2330억원을 현재 GJC채무

액으로 보고했다. 280억원은 동부건설 준공대금 136억원, 세금 납부 80억원 등을 위한 신탁대출금이다. 강원도가 돌려받을 수 없는 GJC채무액은 735억원으로 추산됐다.

강원도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중도부지 잔금 736억원을 회수하고, 레고랜드 안정화·서면대교 건설 등 지가 상승분을 고려해 상가 3~6부지 등 잔여부지 매각을 통해 1510억원을 수익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승순(강릉) 의원은 “레고랜드 방문객 저조 등 효과가 시민기대에 못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 04 24 ( )

## 김정수 道의원, 광폭행진 주목 화제

“민생실천 맡은 바 임무 충실할 터”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수 道의원의 광폭행진이 주목받고 있어 화제다.

초선이라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철원 관련 예산 확보가 돋보이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철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실천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김정수 의원은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6억 7천만 원을 비롯해 오지리 축구장 정비사업 3억 9천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사업 10억 원, 철원오대쌀 광고비 1억 원, 미곡처리장 재현을 측정기 4천만 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혈압계 2천만 원, 철원역사공원 저잣거리 조성 4천만 원, 가축분뇨 부숙 활성 촉진제 지원 2천2백만 원, 강원도민 생활체전 지원 4천만 원, 철원군 관내 어린이집 지원 1억 원, 철원군 관내 경로당 전동테이블 1억5천만 원, 농가 수분측정기 지원, 복지시설 스타렉스 자동차 지원, 철원고등학교·철원여자중고등학교·동송초등학교 3억 원,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1억 원 등을 확보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4 25 ( )

02

## 망상1지구에 칼 빼든 김진태 지사 “이번 감사 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전임 도정 겨냥 해석 반박  
“강원도민 피해 막기 위한 것”

속보=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강원도가 감사(본지 4월 24일자 1·3면)에 나선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해 전임 도정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전임 지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인천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이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를 꼭 하기 위해서 감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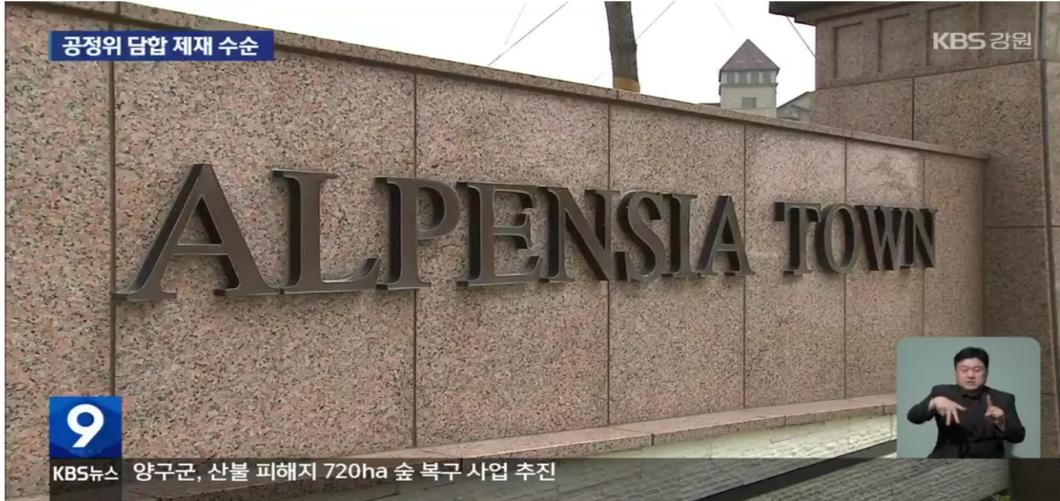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듯, 정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 9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포함돼 있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씨의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이었는 데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 정치적 고려를 다 배제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원도판 대장동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끝을 알 수 없는 의혹 속에서 최전 지사의 해명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집중취재] 공정위, '알펜시아 입찰 담합' 결론



[앵커]

KBS가 보도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조트 공개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강원도의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습니다.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끝에, 2021년 공개매각에서 KH강원개발에 7,100억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KBS의 보도로 입찰에 참여한 두 개 업체가 모두 KH그룹 관련사였다는 점이 드러나,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정가 1조원 짜리 리조트를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8개월여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KH그룹에 대해 사실상 제재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KH강원개발이 리조트를 낙찰받게 하려고 KH그룹이 KH리츠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상윤 KH 회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심의기구인 전원회의는 이러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원소장 :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차원에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대해 KH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영상편집:김동하

고순정

## 江原日報

2023 04 25 ( )

04

### 정순신 아들 생기부 허위 기재 강원도교육청 민사고 행정조치

강원도교육청은 24일 민족사관고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민사고에 재학 중이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출석정지를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 특강을 수강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기재됐다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사고도 허위 기재를 인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위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도록 공문을 통해 행정조치했다. 원선영기자

# 강원도민일보

## 강특법 조기입법 강원 18개 시·군 공동대응 다짐

민선8기 첫 지사·시장·군수 간담회  
특자도 성공출범 시·군 상생 염원

속보=여야정권외 강원특별자치도 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 (본지 4월 20일자 3면)을 재약속한 가운데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강특법 개정안 조기 입법을 결의했다.

강원도는 24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도-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민선 8기 제1회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가졌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들 간 정책 간담회는 약 9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와 시·군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도와 각 지자체는 발표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통해 도와 시군 상생발전,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도민 중심, 지역 주도형 강원특

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도민 스스로 강원도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유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오고 지역 역량이 총결집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각 기관은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고 있는 '강특법 전부 개정 촉구 및 성공출범 메시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입법 동력을 모아가고 있다.

박지은 pje@kado.net

▶ 관련기사 3면

# 강원도민일보

## 9년만에 뭉친 강원 수장들 "특자도 도민 전체 힘 합쳐 투쟁"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부활  
김, 친정체제 구축 정치적 의미도  
발표문 채택·지자체 지원 요청

도지사·시장·군수가 함께한 원팀 회의가 9년 만에 부활, 김진태 도정과 18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등 각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선8기 제1회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가 24일 오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이 있는 고성과 횡성, 화천을 제외한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모두 참석했다.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약 9년 만이다.

12년 만에 도정권력이 교체됐고 시·군 역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석권한 가운데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김지사의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었다.

김지사는 "이렇게 다 모인 게 9년 만이라고 한다. 철원군수님, 양양군수님은 기억 나시나"며 여당 소속 3선 군수들을 띄우고 나섰다. 그러면서 "몇 분 빼고는 다들 처음이고, 서먹하기도 하지만 모이니까 좋다"며 "그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다들 봤는데, 한 달 내로 뵈지 않은 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18개 시장, 군수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강원도와 한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모습



제1회 강원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가 24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만들 수 있다. 춘천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강수 원주시장은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규제를 풀 때 선 물하나 주듯 생색을 내는 상황"이라며 도와 18개 시·군의 단합을 주문했다.

김홍규 강릉시장도 "강릉 산불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힘으로 될 게 아니라 도민 전체가 힘을 합쳐서 투쟁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심규연 동해시장은 강특도와 관련, "동해항 개발관리권을 특별자치도로 이관하고 석회석 폐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3시간 30분 거리에서 온 점을 강조한 뒤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면제 사업 추진을 1순위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강원도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우선 순위는 의료보건분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2025년이면 석공산하 관광소가 폐광,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며 폐광지역 내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요구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시급하다"며 "홍천군당초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태백선 EMU-

150조기 도입을 건의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분담금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산림자원 활용한 산악 관광 개발·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특별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 특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은 면적 86%가 산림이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요구했으며 이현중 철원군수는 "철원군은 전체 면적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 대비 105%를 차지한다"고 강조, 군사시설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국방개혁 2.0으로 군 병력이 줄어 도내 접경지역에 유류군부지가 14개 구역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지역인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색사도 사업도 9년째 정부와 싸우며 얻어낸 결과다. 잘 살아보려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중기 횡성부군수, 최명수 화천부군수, 박광용 고성부군수가 참석,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도와 18개 시군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공동협력을 위한 발표문을 채택했다. 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세종호텔에서 비공개로 만찬을 함께 했다. 박지은·김택형

2023 04 25 ( )  
04

# 강원도민일보

## '강원 최대 인구' 원주마저 소멸 위기...안심단계 단 3곳

소멸위험 주의 경보 '3등급' 해당 읍면동 25곳 중 12곳 4·5등급 대표 신도심 단계등도 주의 단계

강원도내 최대 도시인 원주시도 25개 읍·면·동 중 절반에 이르는 12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최근한국고용정보원은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을 통해 지자체별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공개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1.5 이상(1등급·소멸저위험), 1.5~1.0(2등급·소멸위협 보통), 1.0~0.5(3등급·소멸위협 주의), 0.5~0.2(4등급·소멸위협), 0.2 미만(5등급·소멸 고위험)으로 구분되며, 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정의한다. 도내최대인구밀집지인원주의경우

0.693을 기록,도내에서 가장 높지만 3등급에 해당하며소멸위험주의경보가 내려졌다. 특히 25곳 중 12곳이 4·5등급이다. 가장 낮은 부런면(0.085)을 포함해 귀래면(0.097), 신림면(0.1), 호저면(0.141), 중앙동(0.143) 등5곳이 소멸 고위험인 5등급이다. 소멸 위험인 4등급은 소초면(0.237), 봉산동(0.251), 학성동

(0.255), 명륜1동(0.411), 개운동(0.429), 문막읍(0.434), 흥업면(0.487) 등 7곳이다. 지수가 1.0이상으로 소멸 위험 안심 단계인 1·2등급은 단 3곳에 그쳤다. 1등급은 기업도시가 자리한 지정면(1.805), 혁신도시가 조성된 반곡관설동(1.685) 두 곳, 2등급은 무실동(1.098) 한 곳이다. 나머지 10곳은 소멸 위험 주의 단계

인 3등급이다. 특히반곡관설동과 원주인구선두를 다투는 단구동(0.947)과 대표 신도심 단계동(0.91)이 포함됐다. 나머지 8곳은 명륜2동(0.694), 판부면(0.63), 일산동(0.625), 우산동(0.621), 행구동(0.593), 태장2동(0.553), 태장1동(0.511), 원인동(0.504)으로 대부분 4등급 진입이 목전이다. 정태욱 tae92@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4 25 ( )  
21

## 강원 장애인 12% 사는 동해·삼척... 복지관은 0곳

양 지역 시설 1000명 당 1곳도 안돼 복지관·시설 과반 빅3 도시 몰려 동해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첫 발

# 동해에 사는 홍진욱(44)씨는 자폐성 발달장애인 8세 아들을 키운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지속적인 언어·운동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관을 포함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이 가능한 공적시설이 지역에 전무하다. 4~5곳의 민간운영센터가 전부다. 방과후 학습 지원 바우처가 있지만 치료 동반 가능 시설이 적어 민간치료센터에는 대기자가 넘친다.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 홍씨는 "태권도 학원을 보내

도 방지되어 있다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시설기관을 찾다 보니 한달에 16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동해·삼척 지역 장애인 인구가 강원도 전체의 12%를 차지하지만 관련 시설 수는 최하위로 파악, 장애인 인구 규모와 시설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동해에서 올해 처음 별도의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다. 동해·삼척의 장애인 인구는 강원 전체의 11.9%(1만 2197명·2022년 12월 기준)에 달하지만 관련 복지시설은 전체(172곳)의 5.8%에 불과하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역시 최근 '강원도 복

지지원 현황 1'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인구 대비 복지시설과 기관이 부족한 곳으로 동해와 삼척을 꼽았다. 장애인 인구 1000명 당 수를 보면 동해 0.74곳, 삼척 0.92곳으로 이들 지역만 1곳을 넘기지 못했다. 장애인 복지 기관은 도내 총 172곳 중 과반인 87곳(50.6%)이 춘천·원주·강릉에 몰려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도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곳(춘천·원주·강릉·태백·속초·홍천·횡성·평창·철원)에만 운영중이다. 이중 속초·평창·철원은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이다. 장애인 확대 피해회복 등을 지원하는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춘천에만 있다. 영동지역 신설 필요성도 나왔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수면 아래로

■ 도내 시·군별 등록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복지관 수 (2022.10 기준)

강원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수(명) / 장애인복지 시설-기관(개) / 1000명당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수(순)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09만	1만	1만	1만	5771	4159	4988	5429	5138	3718	3456	3182	3339	3062	1748	1480	2008	2254	2312
1714	5695	9420	3555	7	7	5	9	7	6	5	5	4	6	3	6	4	6	4
1.69	2.29	1.49	1.62	0.74	1.68	1.4	0.92	1.75	1.88	1.74	1.57	1.5	1.31	3.43	2.03	2.99	1.77	2.6

출처/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 복지지원 현황1

가라앉았다. 경기의 경우 북부지역에 자체 예산을 들여 설치, 정부 지원을 오히려 끌어냈다. 안계선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영동지역은 확대 등 신고를 접수해도 연계할만한 곳이 단 기보호시설조차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같은 지역간 시설 불평등은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낳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런 가운데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올해 처음 시작됐다. 도장

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 없던 동해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 자녀의 성장과 자립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무료다. 지역장애인부모 7명이 대상인데 홍진욱씨도 참여중이다. 박진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진로준비가 가장 어려운 동해에서 추진하게 됐다. 관련 시설·기관이 없어 다른 프로그램 병행은 어렵지만 분기별로 장기진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영

# 강원도민일보

2023 04 25 ( )  
/ 19

## 강원 주류업계 생산적 경쟁 기대

-젊은층 겨냥 마케팅 활발, 지역산업 성장 기회

강원도내 주류 업체들이 제품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춰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홍보전을 펼칩니다. 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주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주류시장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제품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주류업계가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강원도내 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업과 지역과 상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도내 업체들은 소주와 막걸리 맥주 등 주종을 망라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생 주류회사뿐 아니라 전통주 제조업체들까지 제품 다양화와 유통다변화를 꾀합니다. 춘천의 한 탁주 제조업체는 최근 MZ세대를 겨냥해 프리미엄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바나나, 사과, 멜론 등의 과일 향으로 차별화하고, 6도의 낮은 도수로 만들었습니다. 춘천 청정쌀로 빚어내 600병 한정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제품은, 술

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횡성의 대표적인 주류 제조 기업은 기존 제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하이볼 기획 세트를 출시했으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의 맥주 업체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과 함께 제주 감귤, 예산 사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전통 소주 붐을 이끈 원주의 한 소주 업체는, 미국 내 수입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올해 상반기부터 뉴욕을 시작으로 세계 무대에 뛰어듭니다.

도내 주류업계의 성장은 지역 경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소비와 고용, 세금 등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와 지자체는 자생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주류시장을 보아야 합니다. 중견 업체뿐 아니라 향토 주류 업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기업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면, 전통 주류 제조업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고객들의 직접 방문을 유도해 관광 경기를 활성화합니다. 주류 제조 공장과 현지 판매장을 여행자 산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4 25 ( )  
/ 19

### 특별자치·2청사 도정 역량 모을 때

-예산도의회통과, 사명감과 열정 필요한 시기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예산이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청사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서별 예산 반영은 절차에 어긋난다며 전액 삭감한 것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불편 등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기획조정실 기관공통경비로 재편성된 2청사 준비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산 투입 사안은 철저히 절차를 지켜 속의 과정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사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음을 도와도의회 양측 모두 엄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동시에 7월 1일 목표일에 맞춰 준비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준비와 병행해 2청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영동권 주민들은 2청사 승격을 계기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큼니다. 자치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의 경쟁력 수준에까지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공무원이 주어진 역할 외에도 자발적으로 일하려는 자세라야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높아짐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도청 내부는 굼직한 인사 요인을 앞두고 벌써 갖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상 체계에 의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지만 '승진이 꽃'이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발성을 끌어내는 인사원칙은 과정과 결과 모두 공정성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와 2청사 굼직한 사안이 눈앞에 닥쳐있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시기입니다. 최근 동해시 망상지구사업 관련 공방에 김진태지사까지 개입하는 모양새에 신중론이 나옵니다. 더구나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의 4월 통과가 무산되고,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20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이미 강원도 감사도 이뤄져 촉각을 닦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한된 도정 역량은 미래를 향해 쓰여야 합니다.

## 망상1지구 몰아주기·특혜 의혹, 명백히 가려내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지시했다. 도는 지난 21일 속칭 ‘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중)씨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권 획득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남모씨가 2017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사업 몰아주기와 쪼개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갈래다. 우선은 남씨가 망상 사업지구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부지 확보 면적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 면적 축소 및 사업지구 분할이 이뤄진 배경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경쟁업체가 있었음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남씨 측이 사실상 단독 협상을 벌였다는 점이다. 당시 망상지구의 사업 면적은 6.39㎢로 구속된 남모씨가 세운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부지는 28%에 불과했다. 이에 경자청은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그해 10월 산자부와 경자청은 망상지구 개발 면적을 3.91㎢로 축소한다. 그러나 동해이씨티의 비중은 46%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경자청은 다시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한다. 동해이씨티는 3.44㎢ 면적의 망상1지구 토지 52%를 확보, 기준을 충족하게 됐고 2018년 11월 사업자로 최종 지정된다. 그래서 몰아주기·쪼개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낙후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성공시켜야 할 핵심 사업이다. 어렵게 지정을 받아 놓고 각종 특혜 의혹으로 개발 사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이를 사장시켜서는 곤란하다. 강원도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오랜

세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차질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늦게 지정된

김진태 지사, 사업자 선정 과정 긴급 감사 지시  
정확하게 규명 않으면 또 다른 시비 불러와  
필요하면 개발 전략 대폭 손질해야 할 때

후발주자로서 여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해안의 강점을 살려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략과 대책을 대폭 손질하는 냉정하고 차분한 결단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와 경자청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문제점을 파악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길어질수록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리한 논란으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된다. 앞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분야별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4 25 ( )  
/ 19

## 교원 감축, 지역 소멸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교육부가 이달 중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직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원 정원 축소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어촌 교육을 교사 직전으로 내몰고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증가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도내 교육계에서는 경제논리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적지 않은 교사가 ‘보따리장수’처럼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등 교원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한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를 줄인다면 최소한의 교육 환경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 등이 소속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교원 정원 감축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균형발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는 면

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정부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교사마저 줄면 지역사회 황폐화도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그 여파가 농어촌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당장 강원지역의 초등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교원 선발 규모가 급감하면서 경쟁률이 치솟은 탓이다. 임용절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폐교까지 겹쳐 농어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재정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교원 감축 정책은 이들 지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수 조정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원 수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농어촌 교육을 고사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이 폐교를 막는 데 공을 들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교원 수급 정책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부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